

尹 장모 최씨 48억 마통, 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대가 의혹 ‘페이퍼컴퍼니 사적금융대부’ 금감원은 해임 권고, 검찰은 무혐의

- 현안대응 TF,尹 장모 48억 마이너스 통장 개설한 신한저축은행 불법대출 고발장 분석, 김건희 씨 EMBA동기 박상훈 전 대표 ‘페이퍼컴퍼니 사적금융대부’ 혐의로 금감원에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후 금감원은 해임 권고, 박 전 대표 금감원 처분 수용
- 김병기 단장, “尹 처가 48억 마통 특혜 대출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 아닌지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가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을 확인한 결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활용한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박상훈 전 신한저축은행 대표에게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금융감독원은 재차 회의를 열어 ‘해임권고’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불복소송 없이 이를 수용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검찰 고발장(2012년 7월 5일)

금융은 믿음가족, 국민은 희망가족-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금 용 감 독 원

우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전화 02-3145- / 전송 02-3145-
치리부서 저축은행감시2국 겸시 팀 팀장 담당자 선임감시역

문서번호 저축 -00713

시행일자 2012. 07. 05

수 신 검찰총장

참 조 수사기획관

사본수신 저축은행감시2국 겸시기획팀

제 목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업무회급행위 고발

요지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우리원의 검사결과 불임과 같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불 임 (신한저축은행) 위법부당한 업무회급 내용 1부

2. 위법·부당한 업무회급 내용

□ 피고발인 (신한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인가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위 피고발인들은 관련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3. 관련법률

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9조(벌칙)제④항제6호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제①항, 제39조(벌칙)제④항제3호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8조(사금융 몰선 등의 죄)

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1)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29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30조(대주주 등의 행위)

당시 금감원은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대 EMBA 동기인 신한저축은행 전 대표 박상훈씨를 포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박상훈 전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박상훈 전 대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해임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13년 2월부터 총 네 차례 이뤄졌는데, 최종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가 출자한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서 사실상 저축은행을 통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금전대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고 보아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시 박상훈 전 대표는 해임권고처분에 대해 불복소송 없이 이를 수용하였다.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2013년 4월 18일)

- 전 △△△△△가 출자한 회사는 서류상회사(Paper Company)로서 사실상 저축은행 직원들을 통하여 운영되었다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전 △△△△가 저축은행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금전대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사적 금전대부 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짐

금융감독원 제재 내역(2013년 6월 13일)

제재내용 공개

- 금융기관명 : (서울)신한저축은행
- 제재조치일 : 2013. 6. 13.
-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제 재 내 역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18억 92만 원	1. 기관 부과
임원(4명)	해임 권고 상당 1명, 직무 박상훈 전 대표이사	4. 제재대상사실
직원(5명)	면직 상당 1명, 정직 상당 4명	(6)사적 금전대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인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재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의 제3자의 재산으로 금원의 대부,채무의 보증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6.16.~ 2012.1.13.기간중 000 등 3명의 임직원은 여신거래처 (0000000 등 8개 업체에 대하여 총 38억원을 대여하고 총 4억 72백만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음

신안저축은행 박상훈 대표에 대한 금감원의 고발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고, 이듬해 박상훈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된 이후 장모 최씨 일당은新安저축은행 으로부터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 원은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 지적하며

“신안저축은행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4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